

서론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
김상배

.....

* 이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368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1년 통일학·평화학 연구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I. 머리말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오늘날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치 사건 중에서 세간의 화두를 제일 많이 장식하는 것을 고르라면, 단연코 ‘북핵과 북한 문제’,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과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 국내체제의 불안정 문제를 들 것이다. 북핵과 북한 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국내 문제이거나 남북한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정치학적 난제들, 즉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미중관계,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여전히 냉전 시대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국내정치 등과 같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북핵과 북한 문제의 압축파일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적 시각은 복합적으로 압축된 북핵과 북한 문제를 펼쳐 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재적 접근

이라는 명목 하에 문제의 본질을 북한 국내문제로 보거나 혹은 남북한 양자 간의 군사안보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북핵이라는 군사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남북한 정부의 말과 행동에 시각이 고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북핵과 북한 문제는 이렇게 협소한 시각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북핵과 북한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문제이며, 더 넓게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적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세계정치의 쟁점들이 연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정부 간 관계의 틀을 우회해서 활동하는 국내외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치 블랙박스 안에 압축파일처럼 갇혀 있는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해체하여 개방된 지평에서 보려는 시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²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이론적 시각들은 북핵과 북한 문제의 압축파일을 푸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는 미국과 북한, 중국 등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군사안보 분야의 대결과 교착을 물질적 권력의 분포나 동학을 중심으로 보는 데 치중한다. 자유주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정치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Nye, 2004), 기능주의적 교류의 확대가 당연히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낳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구성주

.....
² 북핵과 북한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학계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가 눈에 띄는데, 그 중 몇 가지 사례로는 하영선·조동호 편(2010), 윤영관 편(2013), 한신갑(2013) 등이 있다.

의는 남북한의 대결이라는 현실이 영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념의 구조(ideational structure)에 의해서 재구성될 가능성을 강조하나, 여전히 국가 간의 관계에 시각을 고정한다. 요컨대,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은 모두 문제의 일 단면을 강조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문제 자체의 복합적인 성격을 복원하는 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 국제정치이론이 딛고 선 인식론적 전제의 협소성 때문이다. 다소 단순화할 위험을 무릅쓰자면, 이들은 모두 단순계(simple system)의 발상을 기반으로 국가라는 ‘노드(node)’ 행위자에 시각을 고정하고 있어서, 개별 노드의 차원을 넘어서 전개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 현상을 다룰 이론적 도구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노드에 고정된 시각을 넘어서 북핵과 북한 문제를 보는 이론적 시각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 사회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역사학(주로 과학사) 등에서 논의되고 있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이다. 최근 국제정치학에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은 단순한 은유의 차원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정치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참신한 해석을 벌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도구를 제시한다. 이 글은,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을 크게 세 가지 진영, 즉 소셜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 조직 이론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이를 국제정치학 분야에 원용하는 시도를 펼쳤다.³

³ 이 글의 이론적 시각은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여타 국제정치의 이론적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Kahler ed., 2009; Maoz, 2010; Nexon, 2009; Goddard, 2009; Nexon and Wright, 2007. 민병원, 2009). 그러나 이 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미국의 이론적 논의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 이 글은

이렇게 원용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국제정치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노드 중심의 발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이론과 차별화된 분석과 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 시각은 남북한 관계라는 양자관계(또는 북한 국내문제)에 고정된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동북아와 세계정치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과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둘째,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시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정치를 전통안보 분야의 부국강병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전통 안보 분야도 포괄하여 벌어지는 좀 더 복합적인 게임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끝으로, 네트워크 시각은 남북한 관계를 공식적인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의 비공식적인 활동까지도 포괄하는 ‘국가-비국가 복합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네트워크 시각을 국제정치학 분야에 원용하는 이론적 작업의 골격을 소개하는 동시에, 자리매김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제정치학 분야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추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 조직 이론 등의 세 진영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 이론

.....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외에도 기타 네트워크 이론 진영, 즉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도 주목하였다. 이들 논의를 종합적으로 원용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상배(2008), 하영선·김상배 편(2010), 김상배 편(2011), 김상배(20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복잡계 국제정치이론이나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민병원(2005), 손열편(2007), 신육희(2008), 전재성(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 시각, 특히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특히 ‘번역’ 전략과 비인간(non-human) 행위자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벌이는 외교전략의 구체적인 과정을 탐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세계 정치에서 나타나는 국가 행위자의 변환과 국내체제의 변동 그리고 한반도 통일국가가 지향할 미래 모델을 엿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글의 맨 뒤에는 이 책에 담긴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정리하였다.

II. 네트워크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1.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이다(Castells, 2004). 말을 바꾸면,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드는 관계이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러한 노드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관계는 어쩌다 한두 번 마주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규칙적인 만남이 있는 관계이다. 그 관계는 노드들이 서로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노드들이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느슨한 관계이다. 이런 관계들은 필요할 때 급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미 구축해 놓고 있어야 한다. 느닷없이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상시적 교류가 있는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그 용도가 이미 지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평상시에는 잠재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 활성화되는 종류의 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부르는 관계의 쉬운 사례로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런 관계의 존재를 넘어서, 특정한 '패턴'을 지닌 관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라고 말할 때는,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어서 구성되는,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독특한 패턴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계의 아키텍처라는 면에서 네트워크란 수직질서와 수평질서의 중간에 설정된다. 네트워크로 설정되는 관계의 아키텍처는 위계질서(hierarchy)처럼 수직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시장질서나 무정부질서(anarchy)처럼 완전 수평적이지도 않다. 한편 관계의 작동방식이라는 면에서도 네트워크는 집중 방식과 분산 방식의 중간에 설정된다. 네트워크로 설정되는 관계의 작동방식은 완전히 집중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완전히 분산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노드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노드, 즉 허브(hub)가 존재하고 그 허브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즉 중심성(centrality)을 행사하는 복합적인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란 단순히 위계질서와 집중 방식의 조합을 한편으로 하고, 단순한 시장질서와 분산 방식의 조합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스펙트럼의 중간지대에 설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패턴의 관계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네트워크의 개념적 외연을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개념적 내포를 밝히는 데는 미흡하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너무 많은 관계들을 네트워크라는 말 안에서 뭉뚱그리게 된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현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은유의 차원에서 쓸 수 있을지언정,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관계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인 개념으로 쓸 수가 없다. 네트워크 개념을 분석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그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의 상이한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유형에 대

한 좀 더 정교한 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네트워크의 하위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김상배, 2014, 제2장).

2. 네트워크 개념의 세 층위

네트워크의 개념을 은유의 차원을 넘어서 분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네트워크라는 말은 개념적 혼란의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는 어느 단일한 실체가 아닌 여러 가지 중첩된 존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트워크는 그 개념적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용어이다. 간혹 모든 것을 다 네트워크로 설명하려는 ‘개념적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네트워크의 개념을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은유나 묘사의 차원을 넘어서 분석의 도구나 해석의 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으로 네트워크를 논하는 개념적 층위를 구별해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들은 각기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개념적 층위가 조금씩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각도에서 관찰하느냐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변수가 된다. 다시 말해 분석적 층위를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존재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 주는 의미도 염두에 두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학, 물리학, 역사학(주로 과학사) 등에서 다루어 온 네트워크의 개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식론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논의가 국제정치학과 인연을 맺게 된 연구사의 변천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김상배, 2014, 제1장).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actor)로 보는 이론이다. “그린 피스는 환경 분야에 활동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네트워크이다”라고 말할 경우, 여기서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이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속성, 즉 수직질서도 아니고 수평질서도 아닌 조직형태의 속성을 지닌 주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이다. 노드라는 단위 차원보다는 한 차원 위에서 노드와 노드,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링크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네트워크를 본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는 이론 진영의 대표격은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다. 이들 이론의 전제는,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Castells, 1996; 1997; 1998).

둘째는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structure)로 보는 이론이다. “내 주위에 형성된 혈연, 지연, 학연의 네트워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할 경우, 여기서 네트워크란 노드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구조이다.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단위로서의 노드들의 활동조건들이 달라진다. 네트워크는 노드들의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노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이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은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보고 그 특징을 밝히거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은 구조로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Wellman and Berkowitz, 1988; 김용학, 2007).

끝으로, 네트워크를 하나의 동태적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나 자신의 실력을 닦는 것만큼 내 주위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경우, 여기서 네트워크란 어느 노드가 그 주위의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부단한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과정으로 파악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행위자와 구조로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드들 서로의 관계를 맺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이다. 과학기술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원용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이러한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ANT에 의하면 과정으로서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물질적 환경에 해당하는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까지도 참여하는 과정, 즉 ANT의 용어로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이다. ANT에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이다(Latour, 1987; 1993; 2005; Law and Mol. eds. 2002; 홍성욱 편, 2010; 홍민, 2013).

요컨대,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행위자이자 구조이면서 동시에 과정인 존재로 이해하는, 이상의 세 가지 이론 진영의 논의들을 복합적으로 원용해야 한다. 이렇게 행위자-구조-과정으로서 이해한 네트워크의 개념이 북핵과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아 및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주는 유용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해서 보면,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변환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다. 둘째, 구조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해서 보면, 북핵 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 및 글로벌 구조의 내용을 좀 더 가시적이고 분석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 끝으로,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해서 보면, 북핵 게임에 관여하는 관련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

이렇게 이해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노드의 발상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한 새로운 이론은 이상에서 살펴본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탐구하는 주요 논제들, 예를 들어 권력, 국가, 질서(또는 구조) 등에 적용하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정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흔히 거론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기본가정, 즉 권력추구의 가정, 국가중심의 가정, 무정부질서의 가정 등이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에서도 여전히 적절한지를 묻는 작업은 유용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 시각은 현실주의의 세 가지 기본가정을 21세기 세계정치 변화에 걸맞게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김상배, 2014, 제3장).

첫째, 네트워크 시각은 권력추구 가정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현실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핵심 노드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부국강병을 보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권력 개념은 행위자의 속성론이나 자원론의 관점에서 파악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서 주목하는 권력은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비롯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관계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 권력’으로 개념화된다(Grewal, 2008; Castells, 2009; 김상배, 2014, 제5장).

둘째, 네트워크 시각은 국가중심 가정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주권과 영토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시각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과 밖으로 변환되면서, 그 역할과 형태가 변화하는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부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또한 국가 그 자체도 더 이상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위계조직이 아니며, 국가기구 내의 여러 하위 행위자들의 수평적 관계가 활발해지는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시각에서 주목하는 국가는 ‘네트워크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김상배, 2014, 제6장).

끝으로, 네트워크 시각은 무정부질서 가정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보는 국제체제는 개별국가의 상위에 국내정부에 상응하는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질서이다. 이렇게 무정부질서로 개념화되는 국제체제에서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는, 신현실주의적 의미의 ‘구조’로 개념화된(Waltz, 1979). 그러나 자원권력 게임의 양상을 넘어서, 안팎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변환하는 새로운 모습의 국가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를 종전처럼 단순히 무정부질서로 상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게다가 다양한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기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구조의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는 세계질서의 특성은 무정부질서 또는 위계질서라기보다는 그 중간적인 형태의 세계질서, 가령 ‘네트워크 질서(networkarchy)’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다(김상배, 2014, 제7장).

이렇게 수정·보완된 세 가지 가정에 입각해서 볼 때,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근대 국민국가 행위자들이 부국강병 게임, 즉 자원권력 게임을 벌이는 ‘국가 간(國際, international) 정치’로서 국제정치가 변환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행위자들이 벌이는 게임은 네트워크 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권력 게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 질서가 출현한다는 것이 이 글의 이론적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하는 작업의 과제는 남북한의 안과 밖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네트워크들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를 분석하는 이론적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있다.

Ⅲ. 네트워크 구조 속의 북한 문제

1. 구조와 위치의 구체적 파악

네트워크 시각의 가장 큰 유용성은 구조를 새롭게 본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유용하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의 논의를 넘어서 북한 주위에 만들어진 세계 정치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가시적으로 그려내는 (또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그 구조 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각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게 도와준다. 아무리 북한이 고립과 폐쇄라는 이미지로 그려질지라도 대외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소련,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맹과 협력의 관계를 맺었고,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교류하면서 비동맹 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중동 국가들과는 무기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대외적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북한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는 다르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상정하는 구조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세력분포로서의 ‘구조’나 세계체제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는 아니다. 네트워크 시각에서 말하는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 또는 상호작용 자체의 패턴으로서 구조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구조이다. 이러한 관계구도론의 시각을 국제정치학에 도입하면, 구조의 개념을 단위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동태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는 행위자들의 내재적 자원이나 속성으로 환원되는 일종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또는 행위자들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유동적 존재이다(Kim, 2014).

사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것은 추상 개념이어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구조를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하는 관계구도로 이해하면,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사용하는 사회연결망 분석(SNA)은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그림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구도를 보여준다. 물론 SNA는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의 네트워크 전체보다는 어느 일부분만을 그려내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SNA는 다른 어떠한 연구방법보다도 복잡한 현실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추상적으로만 상상하던 보이지 않는 관계의 패턴을 직접 보여주는 힘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로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떠

올릴 수 있는 것은 미-중-일-러와 남북한 등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이다. 동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상호교류와 협력의 네트워크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멤버십 네트워크, 국가 행위자들 간의 동맹 네트워크, 국제 무기이전 네트워크, 국제금융과 무역의 네트워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 유학생들의 네트워크, 인터넷 민주주의의 트래픽 등은 SNA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및 세계정치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중범위 구조의 실체를 SNA를 통해서 소시오그램의 형태로 가시화하는 작업은, 네트워크 내의 관계구도와 상호작용의 패턴을 밝히는 동시에 그 구조 안에서 행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

비록 정확한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막연하게만 떠올리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한계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네트워크 구조의 속성을 단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을 제공하는 유용성도 있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이다(Burt, 1992). 구조적 공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전략적인 목적으로 한두 개의 링크를 추가로 연결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을 의미한다. 그런데 링크를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링크를 하나 더 연결하니까 관련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전체의 관계구도, 즉 구조가 바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공백이다. 그래서 ‘구조적’이다. 단순한 ‘정보의 흐름’을 의미하는 구조적 공백에 더하여 ‘의미의 흐름’에서 발견되는 빈틈인 문화적 공백(cultural holes),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상의 빈틈인 착취혈(exploit) 등과 같은 응용 개념도 유용하다(Pachucki

and Breiger, 2010; Galloway, 2004; Galloway and Thacker, 2007).

구조적 공백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만 당사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빈틈을 남보다 앞서 공략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Burt, 1992; 2005; 2010). 다시 말해, 구조적 공백 개념의 기저에는 중개(brokerage)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확산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만약에 당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을 이어 줄 수 있다면, 그러한 행위가 네트워크의 구도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자신들이 아니면 단절되어 있을,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네트워크의 작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덩치가 작은 나라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렇게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또는 중개권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2.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의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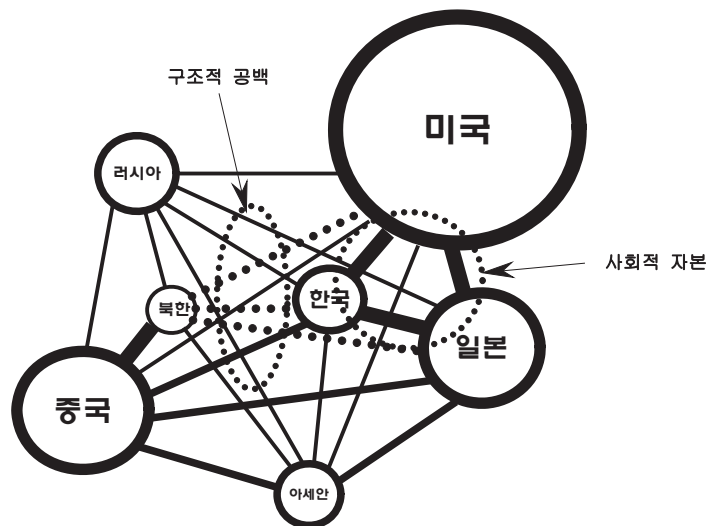
미-일-중-러-남북한이 만드는 6개국,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아세안까지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네트워크 속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원용해서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그려보자. <그림 1>은 엄밀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대략의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직관적으로 그린 것이다(하영선

·김상배 편, 2010). <그림 1>은 가상도이지만 동아시아에서 형성되는 국제적 상호작용의 패턴과 네트워크의 전체적 구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특히 구조적 공백이나 사회적 자본 등을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이 책에서 다른 사례들도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구조의 그림을 밑바탕에 깔고서 논의를 펼쳤다.

<그림 1>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2003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하 6자회담)’의 구조일 것이다. 제1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6자회담은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지정학적 권력게임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이 새로운 도전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변화되는 세력균형의 구도를 바탕으로 하고, 군사안보 이슈, 특히 핵무기 개발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제정치의 게임을 기본성격으로 한다. 그러나 6자회담의 구도는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하여 새로운 면모를 밝혀볼 여지가 많다. 특히 6자회담의 구도는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관계구도의 동학이 담겨 있다. 사실상 6자회담의 구도는 북핵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을 하나의 장에서 연결한 일종의 거래적(transactional) 네트워크이다.

<그림 1>에서 엿볼 수 있는 6자회담 네트워크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림의 중앙에 점선으로 그려진 세 개의 ‘빠진 링크’이다. 이들은 모두 북한과 연결되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링크이다. 지난 10여 년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이들 빠진 링크가 구조적 공백으로 작용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야기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6자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한편 <그림 1>의 네트워크 구도는 현재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양자관계 또는 삼자관계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양대 네트워크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가능성이 커질 경우 북한 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의 갈등과 협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그림 1>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
출처: 하영선·김상배 편(2010), p.80에서 응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림 1>에 담긴 사회적 자본의 의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은 한-미-일 관계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통

적으로 북-중-러 관계가 중요했다. 이는 냉전 시기부터 논의되던 소위 남방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의 대립구도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네트워크이다. 제4장에 의하면, 남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하고만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 미주의 각국들과 폭넓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과 유일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고립된 안보적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관계로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군사동맹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구도는 경제 분야, 예를 들어 북한이 맺고 있는 원조 네트워크에서도 발견된다. 제4장의 사회연결망 분석에 의하면, 무역이나 원조 네트워크에서 중국 이외에 북한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원조 분야에서 발견되는 북한의 빈곤한 네트워크는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제5장은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어, '의존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북한은 소위 '고난의 행군'을 벌임으로써 주변국들을 상대로 나름대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런데 북한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보면, 비교적 대등한 물물교환을 하는 관계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이 부등가교환을 하는 의존과 지원의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비대칭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들은 주로 6자회담의 참가국들인데,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이들 국가들과 일종의 의존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제5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의존의 네트워크는 독특한 의미의 구조적 공백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조적 공백의 개념은 끊어진 네트워크의 흐름을 연결하여 중개권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설정된다. 이에 비해, 의존의 네트워크에서 생겨난 빈틈은 네트워크의 단절을 걱정하는 주변 노드들의 우려를 역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북한이 붕괴하면 발생할 동아시아 질서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은 북한체제가 연명할 정도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구도에서 북한은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정권에 위협적인 상황이 올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빈틈을 착취(exploit)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변국들은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모함을 달래기 위해서 원조를 제공하게 된다. 제5장은 이러한 북한의 착취적 행태를, 석유 자원에 의존하는 중동 국가들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대 추구국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실 동북아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북한이 보유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자신의 지정학적 지위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대추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범위의 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큰 자산임이 분명하다. 제6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나진항의 물류 및 관광 기능,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의 연계 등은 좋은 예이다. 특히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둘러싼 북-중-러 접경 협력은 위치에서 비롯되는 북한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광역두만강 개발계획은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극동, 그리고 북한의 동북지방이 소지역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

다. 기본적으로 양자 내지는 삼자의 구도로 추진되는 북-중-러 접경협력은 주변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동북아 전역에 대한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러 삼각협력의 고리가 한-미-일 삼각협력의 고리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3. 글로벌 네트워크 속의 북한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하면 다양한 이슈를 놓고 형성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 분야에서도 북한은 고립국이라는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였다. 북한의 핵 기술이 핵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구애하거나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핵개발의 성과는 오히려 핵 후발국들과의 수평적 공조를 통해서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핵 비확산을 위한 가해진 국제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한 수평적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은 무엇이고, 북한은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으며, 더 나아가 핵개발 과정에서 소위 ‘아웃사이더’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2장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탈냉전의 와중에 발생한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를 배경으로 하여 핵의 평화적 사용과 군사적 사용 간의 모호함으로부터 오는 국제 핵확산 방지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제10장에서 다룬 국제 인권조약도 북한이 유사한 종류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한 사례이다. 제10장의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국내 인권 상황에 비해서 국제 인권조약에는 상당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연합이 주도한 14개 인권협약 가운데 2012년 말 6개에 가입했다(156위). 냉전 종식 직전 인권조약 가입에서 99위로 중위권을 유지했다. 심지어 북한은 국제 인권조약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인권규약A와 인권규약B에 한국보다 먼저 가입했다. 미국을 포함하여 인권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되는 선진국들도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행보는 매우 특이하다. 북한이 국제 인권조약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 인권의 네트워크 구조가 안고 있는 빈틈을 노리고 외부선전용으로 인권조약에 적극 가입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과 북한의 인권 개념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제10장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비록 양적으로는 국제 인권조약 네트워크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시오그램을 그려보면 한국과 거의 대척점에 있다. 북한은 구 공산권 국가와 동질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 또는 서유럽 국가와 동질성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국제인권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빈틈이 단순한 정보 흐름의 단절을 의미하는 구조적 공백이라기보다는 ‘의미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문화적 공백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 분야에서 북한은 이러한 공백을 활용하고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외부장식용으로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인권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조약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로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

다. 결국 북한의 국제 인권조약 가입의 전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효과를 낳는다.

네트워크 속의 북한을 논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의 공백인 착취혈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이 중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논의라면, 착취혈은 시스템 전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빈틈에 대한 논의이다. 제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은 바로 이러한 착취혈을 공략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각종 악성코드들은 이러한 빈틈으로 침투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착취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 안보의 문제는 국제정치의 전통적 안보 문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특히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태생적으로 착취혈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터넷 자체가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의 효과가 먹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아무리 잘 설계된 정보시스템이라도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보면 그 부산물로서 버그(bug)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빈틈, 즉 착취혈은 해커들이 외부에서 침투하여 시스템의 변경이나 훼손을 시도하는 목표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 및 착취혈을 공략하는 전략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펼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이러한 공백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이미 존재하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차원에서 행위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북핵과 북

한 문제를 봄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위자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탐구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핵과 북한 문제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국가 행위자가 관여하는 국제정치학의 논제라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행위자의 전략과 내재적 속성에 대한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아닌, 이하에서 살펴볼 두 가지 다른 네트워크 이론의 몫이다.

IV. 남북한의 네트워크 전략 분석

1. 외교전략의 분석적 이해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하는 유용성은 행위자들이 펼치는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르든지 동맹을 맺으라고 처방한다면, 네트워크 시각으로 보는 외교전략은 네트워크 권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외교전략의 핵심은 복합적인 관계 맺기를 추구하는 네트워크 전략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의 방향과 동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 도움이 된다. ANT를 원용하는 작업의 유용성은 국제정치 행위자들(ANT의 용어로는 ‘인간 행위자’)이 주변의 물질적 환경 변수(ANT의 용어로는 ‘비인간 행위자’)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치기(ANT의 용어로는 ‘번역’)를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ANT는 이러한 네트워크 치기의 과정을 전형적인 권력정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권력정치의 번역과정으로서 네트워크 외교전략은 세 가지 차원

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놓고 벌이는 게임이다(김상배, 2014, 제5장). 첫째, 네트워크 외교전략은 네트워크 전체의 판세를 읽어 프레임 짜는 게임이다. 이러한 능력은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네트워크의 형세 자체를 짜는 능력, 즉 ‘설계권력’과 관련된다. 둘째, 네트워크 외교전략은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게임이다. ‘위치권력’으로 개념화되는 이러한 능력은 네트워크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어느 특정 노드(또는 노드군)의 관계를 잇거나 또는 끊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다. 끝으로, 네트워크 외교전략은 자신의 주위에 세(勢)를 모으는 게임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행위자가 발휘하는 힘은 커진다. 이런 점에서 ‘집합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네트워크 시각에서 본 권력정치의 목표는 단순히 행위자가 지닌 속성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의 속성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달성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장점은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구체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특히 네트워크 권력게임에서 어떤 행위자는 성공적으로 네트워크를 치고, 어떤 행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의 차이를 탐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ANT의 이론가인 미셸 칼롱(Michel Callon)이 제시한 ‘번역’의 네 단계 전략에 대한 논의는, 막연하게만 떠올렸던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Callon, 1986a; 1986b). 칼롱의 논의는 다소 도식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 간결한 단계론을 통해서 ANT의 핵심원리와 ‘번역’의 계기들을 설명했다. 이 글은 칼롱의 논의를 국제정치와 외교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i) 프레임 짜기, ii) 맺고 끊기, iii) 내 편 모으기, iv) 표준 세우기 등으로 개작하여 원용하였다(김상배, 2014, 제1장).

한편 ANT의 논의는 네트워킹의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ANT에 의하면, 인간과 사물의 동맹관계에서 사물, 즉 비인간 행위자는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다. 나름대로의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성격에 따라서 군인과 정치가들의 선택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무기가 재래식 무기냐 핵무기냐에 따라서 전략전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서 외교관들의 선택은 영향을 받는다. 그 미디어가 라디오나 TV와 같은 일방향의 매스 미디어냐 아니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양방향의 미디어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전략의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중견국이 추구할 네트워크 전략은 인간 행위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존재하는 비인간 행위자도 적극 활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Kim, 2014).

2. 네트워크 권력정치와 번역전략

네트워크 권력정치의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일차적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프레임 짜기이다. 프레임 짜기는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네트워크의 맥락을 파악하고 설계하는 권력의 게임이다. 6자회담의 사례를 보면, 프레임 짜기를 통한 설계 권력의 행사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의 주장에 의하면, 6자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의 협상과정은 미국의 군비통제론적 접근, 중국의 부상국 전략, 그리고 한국의 유연한 관여전략 등의 프레임이 경합을 벌인 과정이었다. 특히 미국의 프레임 짜기가 핵비확산의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중국과 한국

은 북한 문제 전반을 보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프레임 짜기가 우세를 점하는 가운데 북한의 프레임과 충돌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프레임 짜기를 둘러싼 권력정치의 사례는, 제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규범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면서 보편적·생래적 권리를 의미하는 국제 인권규범과는 다른 북한식 인권의 프레임 짜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인권’으로서 ‘근로인민의 권리’와 ‘공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적·시민적 권리보다는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강조되고, 공민의 의무가 권리만큼 강조된다. 게다가 북한이 말하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적대 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대세력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당연하게 수용된다. 또한 이러한 인권의 개념에서는 상대성이 강조되는데, 북한식 인권은 집단, 즉 북한의 인민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프레임 짜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면,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보편적 인권의 주장은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의 내정에 개입하는 실마리라는 것이다.

제11장의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북한을 둘러싼 세계정치 과정에 깔려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인식론적 프레임 짜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분야의 기존 북한 연구는 주로 발생 사건의 인과관계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적 접근이었다. 이에 비해 제11장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들이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를 환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1장이 선정한 사례는, 텍스트 해석을 전제로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 속의 환유 작용을 통해서 이해하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전략이다. 제11장은 유럽연합에서 취하고 있는 대북한 전략이 북한이라는 개별적 단위 차원이 아닌 한반도라는 큰 틀에서 프레임 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전략의 두 번째 단계는 맺고 끊기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관계는 강화시키고 어느 관계는 약화시키는 비대칭적 관계 조율의 전략이다. 맺고 끊기의 과정에서 발휘되는 위치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6자회담의 네트워크는 흥미로운 구도를 보여준다. 특히 위치권력을 발휘할 중개자의 역할이 기대된 국가는 중국이었다. 제1장의 서술에 의하면, 6자회담은 항상 베이징에서 중국의 주재로 개최되었고,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냈다. 게다가 6자회담의 구도에서 중국은 대북 경제관계를 축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진 유일한 국가였다. 위치권력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도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돌파구를 여는 의제를 제안하고 회담 참여국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하나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맺고 끊기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인권조약 가입 전략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제10장에 의하면, 북한식 인권 개념 하에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밖으로 인권조약에 가입만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냉전이 종식될 무렵 북한은 국제 인권조약 가입에 있어 중위권을 유지했으며, 그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인권조약에 가입하여 2012년 말 현재 협약 가입 숫자로 공동 156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순위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악으로 평가하는 여러 보고

와 상반된 것이었다. 제10장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 인권상황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거나 혹은 국제표준에 맞추려는 의도로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했다기보다는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입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적극적 가입을 전략의 카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실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하더라도, 국제표준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적 약속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반증한다.

네트워크 전략의 가장 핵심단계는 세 번째의 내편 모으기이다. 이는 맺고 끊기를 통해 해체되고 재편된 관계를 다시 수습하여, 단순히 연결망을 치는 차원을 넘어서 내 편을 얼마나 많이 끌어 모아 세력을 형성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내편 모으기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제8장에서 다룬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북한 정권의 선전외교이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서 대외적 선전 전략의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북한 정권은 국내외 청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카드 이외에는 사실상 자국의 정책선호를 관철시킬만한 물질적 자원을 결여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만이 가지는 정보의 희소성을 극대화하여 이를 커뮤니케이션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내 편을 모으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표준 세우기이다. 표준 세우기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일반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이 책에서 다룬 사례 중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네 단계 번역전략을 명시적으로 원용하여 표준 세우기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한 것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이다. 제7

장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은 번역정치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존의 남북경협 모델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 짜기’를 바탕으로 취임 이후 대북 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맺고 끊기’ 전략의 좋은 사례이다. ‘내편 모으기’의 관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추진 과정에는 한국의 협력업체와 다국적기업, 국제투자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행위자, 그리고 통신과 통행 및 통관 설비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해 갔으며, 결국에는 개성공단이라는 표준 세우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개성공단이 성립하는 과정은 남북한이 각 단계들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진행한 네트워크 치기의 산물이다.

3. 비인간 행위자와 남북한 관계

ANT를 원용하는 작업의 유용성은 국제정치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한다는 데 있다. 제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인간 행위자는 북한의 핵무기이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전제로 한 남북한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 ANT의 시각에서 볼 때, 핵무기를 국제정치와 연결시키는 문제는 인간과 사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력정치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 핵을 비롯한 군사력을 어떻게 번역하여 국제정치라는 인간 네트워크로 포함시키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누가 번역의 과정을 주도하여 표준 세우기에 이르는가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경협의 과정에도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

들이 관여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6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개성공단의 330만㎡에 이르는 부지 자체가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지리적인 특성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 남북한 당국자들의 퇴행적인 사고와 행동을 저지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통관의 3통 시스템도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이다.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네트워크의 확장과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의 활용성을 높이고, 휴대폰의 사용을 허용하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자동출입체계를 구비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북한 정치와 남북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이다. 제9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북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 변동을 기대케 한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 야기할 북한 국내체제의 변화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식량난, 권력세습 등에 기인하는 정치사회 변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외부 감시와 내면화된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자동적으로 반체제 운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비인간 행위자로서 디지털 미디어의 부상이 일방향적 선전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서서히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는 다소 상이한 맥락에서 인터넷,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

터 프로그램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남북한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는 사이버 안보이다. 제3장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전통적인 안보문제와는 달리,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에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이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격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 스틱스넷, 플레임, 샤문 등과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는 그야말로 ANT에서 말하는, 행위능력(agency)을 가진 비인간 행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수십만 대의 좀비 PC를 동원하여 감행되는 디도스 공격이나 최근 주목받는 APT 공격 등의 수법도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비인간 행위자이다.

V. 네트워크로 보는 국가변환과 통일모델

1. 새로운 행위자의 속성 이해

네트워크 시각, 특히 네트워크 조직 이론은 북핵과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세계정치 행위자들의 새로운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사회생활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관계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가진 행위자이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에 의하면,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에서 전통적인 위계조직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지닌 행위자가 부상한다. 이러한 행위자는 위계조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산된 조직형태, 예를 들어 '시장'의 조직형태를 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양자의 중간적인 조직형태를 지닌, 소위 네트워크의 형태이다.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도 20세기 후반 들어 근대 국민국가의 변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이는 새로운 조직형태의 부상에 대한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위 네트워크 국가의 출현에 대한 논의로 나타났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조직 이론으로 보면,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물질적 환경의 출현은 네트워크 조직형태의 부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정보화(좀 더 구체적으로는 IT변수)는 국민국가의 변화가 발생하는 물질·지적 조건의 변화를 대변한다. 사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정치사회 변동의 기저에는 IT변수, 즉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창출하는 네트워크라는 변수가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IT변수는 21세기 세계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독립변수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IT변수를 외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론화시키지 않았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정보주의(informationalism)’에 대한 논의는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층위, 즉 세계정치라는 ‘상부구조’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변환과 그 ‘물질 토대’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발달을 엮어서 보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Castells,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시각이 이 책의 논제에 던지는 의미를 요약하면, 새로운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형태와 내용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첫째, 남북한 관계와 동아시아 세계정치에서 활동하는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복합체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네트워크 국가는 정부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라 함은, 정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도 참여하는 복합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국가-비국가 복합 행위자에 대한 논의는 소위 거버먼트(government)형 남북한 관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형 남북한 관계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행위자 변환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네트워크 시각은 남북한의 각 국내체제에서 발생하는 변

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통상적으로 노드 행위자를 블랙박스로 놓고 주로 그들의 관계만을 탐구하는 소셜 네트워크 이론과는 달리, 네트워크 조직 이론은 노드 행위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에도 주목한다. 남북한 관계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네트워크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도 ‘내편 모으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남북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개되는 여론분열과 남남갈등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체계정비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끝으로,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논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엿보는 데도 유용하다.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추구할 통일국가의 모델은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모델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21세기 국가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가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통일국가의 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는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관계망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외적으로 네트워크 국가는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여 출현하는 국가이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 모색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2. 복합 행위자의 역할과 북한체제의 변동

이 책에 담긴 사례 중에서 국가-비국가 복합 행위자의 역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제3장에서 다룬 사이버 안보이다. 사이버 테러와 공격은 위계조직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네트워크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테러와 공격은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벌이는 소위 ‘비대칭 전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최근에 사이버 안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국가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심지어는 미국 등에서 보고되는 사이버 공격의 사례는 이러한 국가의 그림자를 엿보게 한다. 국가 행위자는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방어의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과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사이버 테러와 공격을 막으려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두 얼굴을 한 국가의 몸체는 전통적인 위계조직이라기보다는, 안과 밖으로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국가이다.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경협은 민간 행위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이다. 개성공단은 정치 리더십이 주도하고 남북한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작품이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서 민간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백여 개 한국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벌였다. 여기에 추가로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중요한 행위자이다. 개성공단에는 2012년 말 현재 780여 명의 한국 근로자와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는 2004년 10월 북한 근로자

55명이 처음 고용된 이후 7년 4개월 만의 성과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근로자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25~30만 명이 개성공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북경협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복합성은 향후 두만강경제특구사업을 위해서 북-중-러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도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8장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내부 정보의 외부유출과 외부 정보의 국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한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초국적 민간 행위자들의 비밀스런 활동을 부추겼다.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과 국경을 넘나들며 상업 및 무역 활동을 벌이는 조선족이나 화교, 중국 상인, 불법 밀수업자들, 그리고 탈북기획 브로커들은 북한 내부의 정보를 국제무대로 유출하거나 국외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통시키는 일종의 비공식적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회 채널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북한내부 사정에 대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형태로 서로의 실상을 알아가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행위자들이 결집될 경우 북한 국내체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 2011년 봄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에서 인터넷, 휴대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소셜 미디어가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운동은 국경을 넘어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등 지역 내 국가들로 확산되어 ‘아랍의 봄’이라 불린 지역 민주화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이 모아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로 대변되는 비 인간 행위자 변수가 북한 주민의 정치·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 국내체제 자체의 변동을 어느 정도 야기할 것인가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3. 통일국가 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일(統一, reunification)이라는 용어는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행위자 중심의 발상, 즉 노드 차원의 발상이 낳은 소산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이란 다름 아니라 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민족이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지난 백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추구해왔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민국가를 단위로 설정한 것은 근대 국제정치의 이념형적 전제였다. 그런데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지향할 미래 국가모델로서 근대 국민국가는 얼마나 적절할까?

이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시각은 향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국가와 같은 위계조직 모델은 안팎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자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별국가 차원에서 배타적인 국가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민족(nation)’의 경계 안에서 국가모델의 이념형을 규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안과 밖으로 다양한 행위

자들이 대외활동에 관여하게 되면서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대외적으로도 상대국가나 국제기구, 초국적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도 미래 국가모델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대 국제정치란 행위자로서 국민국가가 여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 경쟁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과정이다. 근대 국제정치의 형성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지배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설명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서구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국가 행위가 여타 비국가 행위자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지배적 행위자-네트워크로 부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근대 국제정치에서 지고의 관념으로 이해되는 ‘주권’의 원칙이라는 것도 일종의 ‘번역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가 성공적인 ‘번역’을 행한 후에 블랙박스를 친 결과가 바로 국가 주권의 관념을 바탕으로 ‘국가 간 질서’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Latour, 1993).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블랙박스의 뚜껑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국제정치의 모습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질서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탈근대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행위자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도전은 근대 국제정치의 블랙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의 뼈대를 드러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국가 행위자가 ‘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자-네트워크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점하게 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당연시되던 근대 국제정치의 블랙박스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국민국가 체제의 고장 조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패턴의 세계정치가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근대국가를 둘러싼 블랙박스 열기를 보여준 사례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복합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국적으로 감행되는 사이버 테러와 공격은 단순히 일국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법제도를 정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니만큼 긴밀한 국제협력의 노력을 통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정부 간 협력의 틀을 넘어서 국제기구나 민간 행위자들도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최근 사이버 안보에서 진행되는 양상은 근대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들 간의 협력 모델과 함께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의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첩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VI. 이 책의 구성

네트워크 시각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및 세계 정치를 분석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외교안보 네트워크 속의 북한’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연구영역인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동학을 다루었다. 핵심 논제는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 안보와 같은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이슈를 놓고 벌이는 남북한 및 세계정치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다.

제1장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핵 문제와 6자 회담’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국가들 간의 세력분포와 각 국가들의 전략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위치권력, 구조적 공백, 번역, 의무통과점 등과 같은 네트워크 이론의 개념들을 적용하였다. 6자회담은 전통적인 국가들 간의 권력정치를 기저에 깔고 진행되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을 비롯한 참여 국가들이 북핵 문제의 번역을 둘러싼 네트워크 권력의 게임을 벌인 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6자회

담에 임하는 각국의 네트워크 전략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종의 위치 권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이 담당했던 중개자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결국 6자회담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의무통과점을 넘지 못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제2장 ‘국제 핵통제 네트워크와 북한의 핵미사일 동맹 네트워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동한 핵 후발국들과의 동맹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핵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 구애나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2장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에 북한이 이룩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성과는 오히려 핵 후발국들과의 수평적 공조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기성 국제질서의 외곽에 위치하는, 소위 ‘문제국가’인 이들 핵 후발국들과 북한이 ‘협력’의 네트워크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확산’과 그 ‘통제’를 위한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북한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추적하였다.

제3장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북한’은 네트워크 시각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테러와 공격을 보는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최근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를 보는 국제정치학계의 논의를 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나 핵억지에 기원을 두는 이론적 시각을 원용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군사적 보복을 가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배후지를 제공한 국가나 업체에 대해서 전통적인 국제법과 전쟁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들 시각은 복잡계 현상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테러와 공격을 냉전 시대에 기원

을 두는 단순계의 발상으로 다루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장은 사이버 테러와 공격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제2부 ‘정치경제 네트워크 속의 북한’은 현재 남북한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경제 분야의 이슈들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핵심 논제는 무역과 원조, 남북한 및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권력정치이다.

제4장 ‘동맹, 무역, 그리고 원조 네트워크 속의 북한’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동맹, 무역, 원조 네트워크 속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다. 제4장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과 유일한 방위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성이 높는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 무역과 원조 분야로 확대되었다. 무역 네트워크에서도 북한의 자원 수출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원수출의 방식도 철광석이나 석탄에 치중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이외에 북한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국가행위자를 찾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적·문화적 상호의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고립노선의 기회비용은 북한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제5장 ‘탈냉전 시기 북한의 의존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시각에서 생존을 위해 북한이 활용하는 의존 네트워크의 게임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원조 분야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네트워크 전략이 전면적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사전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외부세계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북한이 짧은 시

간에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변혁의 길을 걸을 것으로 추정할 때 중간목표로서 소위 ‘지대국가’의 역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동안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보다는 노동력, 지하 자원, 전략적 요충지로서 위치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역으로 활용하는 과정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정 정도의 긍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협력과 동북아 지역정치’는 네트워크 시각에서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소지역 경제협력 문제를 분석했다. 제6장에 따르면, 이 소지역 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소지역 협력의 지역 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네트워크의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 이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이러한 동북아 소지역 협력은 중국이 주도하는 경직된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중국 견제로 와해되는 것보다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6장의 주장이다.

제7장 ‘남북 경제협력의 네트워크 구조와 시사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 개성공단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조명하였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데 있다. 개성공단이 수차례에 걸친 남북한의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행위자-네트워크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탄생과 부침 과정은 이종(異種)적 행위자들이 동원되고 결합하고 분열하는 번역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남북경협 의 표준으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 통행, 통관 등의 문제에서 발견되는 비인간 행위자의 변수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성 이외의 북한 지역과 글로벌 행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제3부 북한과 한반도 주변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정치의 주제들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다루었다. 핵심 논제는 디지털 미디어, 인권 등과 같은 초국적 이슈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네트워크 전략과 북한 국내체제의 변동 가능성 및 이들 이슈가 덮고 서 있는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성찰이다.

제8장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북한정권의 국제청중 호소전략’은 네트워크 시각에서 북한의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수직적 메커니즘과 국경선을 넘나드는 초국적 행위자들이 창출하는 수평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제8장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청중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게 만들었다. 희소정보에 대한 폭로와 청중비용을 발생시키는 자기손실의 위장전략, 그리고 당국 의사 진실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자가입증 전략은 북한 당국이

추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북한정권이 사용해온 선전선동과 대외선전 전략을 단순히 협박이나 남남갈등 유발전략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북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는 것이 제8장의 주장이다.

제9장 ‘디지털 미디어와 정치사회변동: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북한 사례’는 디지털 미디어가 야기하는 정치사회 변동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북한에서는 인터넷, 휴대폰, DVD, USB 등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디지털 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중동지역에서와 같이 급격한 정치사회 변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제9장의 주장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이 아직도 보편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보급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북한에는 위기를 변동의 계기로 밀고나갈 정치사회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이 지속되면서 북한에서도 정치사회적 변동의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제10장 ‘국제인권조약 연결망에서 북한의 위치’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는 북한의 전략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에 비교할 때 북한의 인권 개념은 개인 권리가 아닌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정치적·시민적 권리보다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강조하고,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북한식 인권을 고수한다. 북한식 인권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는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연합이 주도한 인권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는 과정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북한은 인권보호를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는 의정서보다는 원칙적이고 모호한 의무를 정하는 협약에 가입했으며,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과 부합하는 협약과 의정서에 주로 가입했다.

제11장 ‘유럽연합의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 속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석: 환유를 통한 텍스트의 이해’는 북한 문제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해석학적 전제 위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펼쳤다. 제11장에 의하면, 개념적 혼성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는 메타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행위자 중심의 기존의 인식론적 사유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문제의식과 전제를 공유한다는 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는 하나의 시험적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1장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들이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를 환유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국제정치의 현실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4), pp.35-61.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별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 민병원. 2009.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49(5), pp.391-405.
- 손열 편.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지식마당.
- 신옥희. 2008.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29(2), pp.63-88.
- 윤영관 편. 2013. 『한반도 통일』. 늘품플러스.
-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하영선·김상배 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영선·조동호 편. 2010.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동아시아연구원.
- 한신갑. 2013.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홍민. 2013.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16(1), pp.106-170.
- 홍성욱 편.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t, Ronald S.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rt, Ronald S. 2010. *Neighbor Networks: Competitive Advantages Local and Person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llon, Michel. 1986a.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John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196-23.
- Callon, Michel. 1986b. “The Sociology of an Actor-network: the Case of the Electric Vehicle.” in Michel Callon and John Law, Arie Rip, 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of Science in the Real World*. London: Macmillan, pp.19-34.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1997.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1998. *End of Millennium*.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3-48.
- Castells, Manuel.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oway, Alexander R. 2004.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Galloway, Alexander R. and Eugene Thacker. 2007.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559-592.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Sangbae. 2014.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EAI Middle Power Diplomacy Initiative Working Paper-02, East Asia Institute.
- Latour, Bruno.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Latour, Bruno.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runo.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John and Annemarie Mol. eds. 2002.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xon, Daniel and Thomas Wright. 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pp.253-271.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Pachucki, Mark A. and Ronald L. Breiger. 2010.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pp.205-224.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